

살인정권 이명박 OUT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향해 돌진하던 이명박 불도저가 기어코 6명을 깔아 죽이는 대참사를 일으켰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냐”라는 절규가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한다.

이명박은 지난해 여름 촛불에 크게 데인 후 한동안 기죽어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이 지난 연말부터 다시 불도저에 시동을 걸면서 비극의 씨앗이 뿌려졌다. 연초에 이명박은 “속도전”을 외치며 골수 MB팬들로 구성된 ‘친위 돌격대’까지 구성했다.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며 이명박은 노동자·서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었다.

촛불을 짓밟는 포악함이 이명박의 맘에 들어 새로 경찰청장이 된 김석기는 친재

벌·반서민 막장 정권의 충성스런 행동대장이었다. 이 자가 ‘속도전’을 위해 용산 철거민들에게 18개 중대 경찰력과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해 강경 진압을 하면서 비극이 일어났다.

따라서 용산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 돌격이 낳은 학살이 이 사건의 진상이며 살인교사범 이명박과 행동대장 김석기가 책임자다.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대하듯 우리 노동자·서민들을 대해 온 이 막장 정권이 용산을 가자처럼 만들어 버렸다. 사람을 죽여 놓고 “도심 테러”를 운운하며 희생자의 아들까지 구속하는 저들은 흉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용산 참사에 대해 <중앙일보>는 “광우병 파동 못지않은 폭발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습”을 주문했다. 실제로 용산 참

사는 지금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서민·반민주 정책이 쌓아 온 우리의 분노와 불만을 폭발시키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막장 정권

무엇보다 경제 위기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언제든 다시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는 ‘잠재적 촛불시위자’들이 우리 사회의 저층에 계속 쌓여가고”(《조선일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장 정경길은 “2월이 되면 대졸 실업자들이 쏟아지고 … 이들이 [상황을] 구조적 문제로 돌리게 되면 …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곤 바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이명박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모조리 노동자·서민에게만 떠넘

기고 있다. 재벌·부자 들의 세금을 깎아 주면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리려 한다.

‘중단’을 약속했던 대운하·공공부문 민영화도 이름만 바뀌서 추진하고 있다. “닭을 닭이라,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말했을 뿐인 미네르바를 구속했다. 방송까지 ‘조종동 쓰레기’처럼 만들려 한다. 노동자·서민의 팔·다리를 묶고 눈·귀·입을 막는 ‘마스크 법’, 사이버모욕죄 등 온갖 반촛불 악법도 추진하고 있다. 화약고에서 불을 뭇기는 강경 대북정책으로 제3차 서해교전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개악과 반동의 책임자인 이명박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퇴진의 결정적 이유를 하나 더 추가했을 뿐이다.



제3차 범국민 추모대회

일시_ 2월 7일(토) 오후 4시
장소_ 청계광장 (수도권 집중), 전국 동시다발

용산참극과 망자들을 기억하는 시국미사

일시_ 2월 2일(월) 오후 7시
장소_ 청계광장



이렇게 태워 죽인 자들이 진정한 살인범이다

살인으로도 부족한가!

전철연 탄압 중단하라

다섯 명의 철거민을 숯덩이로 만들고 유족의 동의도 없이 시신을 파헤친 정부가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기려 열을 올리고 있다.

검찰은 아직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은 용산 철거민 농성자를 구속하고 전철연 회원들의 계좌를 추적해 마치 전철연이 망루 농성에 개입한 듯가로 돈을 받아 낸 ‘불순’한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불구덩이에서 아버지를 잃고 산소호흡기에 목숨을 의존하고 있는 철거민마저 구속했다. 생존자들의 진술은 듣지도 않고 철거민들이 망루에 시너를 뿌렸다고 한다. 철거민들을 폭력범으로 낙인찍는 선동도 계속되고 있다. “도심

테러”, “폐잡이”라고 고인들을 모독하고 있다.

구속자를 석방하라

그러나 소박한 도시 서민들이 화염병, 새총, 시너를 들고 한겨울 망루로 오르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

그동안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은 마지막 생존 수단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하소연했지만 돌아 온 것은 용역강제의 욕설·협박과 폭력이었다. 용산 참사 당시 무전기록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찰은 용역강제와 언제나 한편이었다. 결국 “생존권을 무시하는 개발정책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발전해서 오늘의 망루”(전철

연 남경남 의장)가 됐고 살기 위해 화염병이라도 들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물대포와 쇠파이프를 동원한 경찰과 특공대 1천6백 명의 조직된 폭력과 철거민들의 화염병은 비할 바가 못 된다.

용역 강제와 경찰이 합동 작전을 펼쳐 놓고도 “제3자 개입 금지” 운운하며 전철연을 마녀사냥 하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건설사와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민들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잔인한 재개발과 경찰·강제들의 폭력, 그리고 이를 진두지휘한 최고 책임자 이명박이야말로 용산 참사의 진정한 ‘불순 배후’다.

뉴타운은 서민 녹다운 정책

용산 참사는 이명박 불도저의 개발 정치가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시작일 뿐 서울 지역만 뉴타운 34곳, 재개발 구역 3백여 곳이 지정돼 있어 개발로 인한 갈등은 화약고처럼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지역 전체 가구의 70퍼센트에 이르는 세입자들에게 새로 들어서는 40~50평짜리 호화 아파트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새로 짓는 주택의 17퍼센트로 턱없이 부족해 10명 중 8명은 수십 년을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야 한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집을 구하다 보니 전월세도 명달아 뒀었다. 서울 곳곳이 개발중이라 어딜 가나 사정은 똑같다.

이들이 갈 곳이라곤 결국 더 열악한 고시원, 지하방, 쪽방뿐이거나 아예 서울을 떠나야 한다. 조합한테서 받은 돈 몇백만 원에 빚을 얹어 이주하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차다찬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용역 강제들의 무법천지가 된 철거 예정지 - 뉴타운은 '서민 대청소'

서민 몰아내기 청소다.

개발 소문이 돌고 나서 한때 용산 땅값은 평당 1억 5천만 원까지 올랐다. 삼성과 포스코 등 재벌건설사들이 용산에 짓고 있는 50~95평 아파트 가격은 33억 원에 이른다. 2000~2006년에 집값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이만 6백48조 원이다.

국·공유지가 30퍼센트도 안되는 땅덩이에서 사유지의 75퍼센트를 상위 5퍼센트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국민 중 절반이 셋방살이를 하는 이유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종부세 삭감에 이어 땅부자, 투기꾼들에게 돈다발을 안겨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주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땅덩이에서 사유지의 75퍼센트를 상위 5퍼센트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국민 중 절반이 셋방살이를 하는 이유다.

이명박이 물러나야 할 이유들

용산 철거민 살해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법 개악
대량해고, 임금 동결·삭감
공기업 민영화
경쟁 몰입 교육
민주주의 공격
대운하 강행
방송장악 기도
노동자·서민 죽이는 물가인상
의료민영화 강행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앞당길 MB악법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지난 연말에 처리하지 못한 MB악법들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안달이다.

이 악법들은 쫓ult 때문에 미뤄진 ‘재벌천국 서민지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우선 조중동과 재벌들에게 방송을 넘겨주려는 언론악법들이 있다. 노동자·서민을 공격하는 쓰레기 기사로도 모자라 조중동 방송의 ‘맹박 뉴스’를 매일 보라는 것이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도 재벌들이 그동안 애타게 바라던 것들이다. 한미 FTA 비준안, 물·의료 민영화 법안들은 사회 양극화를 촉진할 ‘서민지옥’ 악법들이다.

MB악법에는 이처럼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전담시키는 법뿐 아니라 민주주의 압살 법안들도 많다.

‘사이버 모욕죄’, ‘집단소송제’, ‘복



연초 MB악법 저지의 1등공신 언론 노동자 파업

면금지법’ 등은 인터넷과 거리에서 표현·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다. 휴대폰 도청 등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는 국정원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서민학살 정책이 불려온 노동자·서민의 저항을 공안 통치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악안도 MB악법 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용산 참사에도 아랑곳없이 땅 투기와 전국적 살집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MB악법을 막아낸 핵심 동력은 거대한 반MB 여론 속에 단호하게 진행된 언론노조의 파업이었다. 이것이 민주당을 악법 저지에 나서게 등 떠밀었고, 결국 이명박은 악법 처리를 포기했던 것이다.

따라서 시위·파업 등 노동자·서민의 대중투쟁을 통해 살인정권의 서민 학살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



국민이 하자면 반대로만 가는 이명박

이명박식 ‘고통분담’

비정규직 확대, 임금 삭감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짧아 실업자가 늘고 있다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2년 뒤에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해고하는 기업주들을 처벌 규제하기는커녕 4년 동안 멍때려 비정규직 부려먹다가 해고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파견허용업무도 확대하려고 한다. 이것은 경제 공황 시기에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저임금 일자리만 늘려 전체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잔인한 공격이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연장하고 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강화하고 청년실업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 달에 80만 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도 삭감하려 한다. 마른 수건을 쥐어짜 바닥을 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알 턱이 없는 3백억 원대의 재력이 이명박은 심지어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아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임금 삭감을 한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다.

왜 노동자들만 임금 삭감의 고통을

‘전담’하고 기업주·부자 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정부가 기업주들과 대주주들에게 세금을 거둬 재정 지출을 늘리면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경기가 좋아 지길 기다리며 쓰지 않고 쌓아 둔 1천 개 기업의 사내유보금만 3백조 원이 넘는다. 이명박이 지난해 기업주 부자들에게 깎아 주기로 약속한 세금만 80조 원이 넘는다.

이런 돈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쓰여야 한다. 대운하 살집이 아니라 복지를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

대재앙을 불러 올 이명박의 대북 정책

1월 30일 북한은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전쟁 직전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남한과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을” 무효화한다고 선언했다. 1월 17일 북한 당국이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과의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한 지 불과 2주 만의 일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총체적 파산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는 당선 직후부터 대북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북한 압박 프로젝트인 ‘비핵개방 3000 구상’ 발표, 북의 핵 기지 선제 타격을 거론한 합창의장 내정자의 발언, 통일부 장관의 “북핵 타결 안 되면 개성공단 확대 어렵다”는 발언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식량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매몰차게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고, 제작된 10·4 선언

을 더 자극했다.

물론 북한의 강경 대응을 옹호할 수는 없다. 남북 간 긴장 고조는 남한 정부가 남한 민중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서민들이다. 지난 60년 동안 원치 않는 분단으로 고통받아 온 남북한 민중이 단결하는 데도 해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 이런 강경 대응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엔 ‘서해해상군사경계선’에 대한 합의 폐기도 선언했는데 이것은 NLL 화약고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두 차례 서해교전을 통해 교전 수칙이 강화되고, 구축함·미사일·해안포 등 무력이 증강된 상황에서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차 서해교전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도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1999년 제1차 서해교전

용산 참사 항의에서 이명박 퇴진으로



지난해 6월 10일 1백만 명을 결집시킨 촛불항쟁은 이명박 퇴진 문턱까지 갔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입증했고, 거대한 반(反)이명박 정서에 불씨를 던졌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숨막히는 불안감,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반서민적 악행에 대한 반감과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지난 몇 달 동안 자리잡았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이 갈 곳 없는 철거민들의 마지막 몸부림마저 살인 진압으로 짓밟았다.

그래서 용산 참사가 벌어지자마자 자연스럽게 운동 참가자들은 이명박 퇴진을 외쳤던 것이다. 이명박 퇴진은 이미 지난해 촛불항쟁 참가자 대다수로부터 지지받았던 요구다.

그러므로 이명박정권철거민살인진압국민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이명박 퇴진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요구를 반대하거나 후

퇴시키려는 일부 단체들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바로 이런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이명박은 간신히 지켜 온 집권 토대를 또다시 태워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악착같이 항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은 1월 30일 TV 토론에서도 전철연을 “폭력단체”라고 매도하며 “[김석기] 내정을 철화할 때가 아니다”,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다. 철거민 학살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것이다.

정말이지 이명박 정부 하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과 안전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을 지 알 수 없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크고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이명박 정권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을 둘러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전철연을 집중적으로 마녀사냥하고 대책위가

주최하는 31일 집회를 불허 통보한 상황에서 1월 31일과 2월 1일로 집회가 분산된 것은 아쉽다.

이명박 퇴진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바로 지금 비정규직법 개악, 대량 해고, 임금 삭감 등 이명박과 사장들의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의 성공만이 아니라 노동자들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월 14일로 예정된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순차적으로 계획된 투쟁들을 가급적 빨리 당겨 이 투쟁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촛불항쟁의 절정기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미루다가 결국 촛불이 만든 기회를 놓쳐버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단결의 성과로 이 운동을 ‘제2의 촛불’로 성장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의심스러운 상대

용산 참사로 촉발된 운동에는 민주당도 참가하고 있다.

국회에서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일시적이고 제한된 공조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명박에 맞서 일관되게 싸울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운동이 단지 이명박 정책 중 일부만이 아니라 정권 자체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발전한다면 민주당은 심하게

동요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즉시 이명박과 “경제 위기 문제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MB악법 저지 투쟁 과정에서도 중부세 무력화를 포함한 예산안을 한나라당과 합의했고, 이후에도 민주노동당 몰래 한나라당과 타협할 기회를 엿본 전력이 있다.

이명박이 추진하려고 하는 비정규직 확대 정책과 한미FTA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것이다. 뉴타운 확대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도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토록 일관되지 못한 이유는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의 고액후원금 의존률이 높고, 기업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기 때문이다.

유럽은 파업중

우리도 유럽처럼

유럽 전역의 노동자·서민들이 자신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정부와 부자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12월 경찰 폭력으로 16세 소년이 살해당한 뒤 노동자들이 대거 참가한 대중 항쟁이 시작됐고, 이것이 그리스 우익 정부의 공공서비스·연금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연결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벽에 부딪혔다. 공항 민영화에 입찰한 일부 기업들이 슬그머니 발을 빼는 등 성과를 얻고 있다.

아이슬란드 대중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투기 행위를 고무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한 우익 정부를 날려 버렸다.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24시간 포위하고 심지어 총리의 자동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자 우익 총리와 내각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1월 29일 2백50만 명의 노동자·학생·서민들이 사르코지 우익 정부의 개악 정책에 반대하며 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정부의 교사 대량 해고·연금 개악·공공서비스 민영화 기도에 반대하고 불평등 개선과 정리 해고 중단, 최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지난해 9월 월가 금융기관 붕괴로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 경제 위기에 맞서 벌어진 시위들 중 가장 큰 규모였고, 새로운 반자본주의정당(NPA)같은 급진 정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경제 위기로 프랑스 사회의 급진화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열렸다.

지난 12월에는 프랑스 학생들이 교육 개악에 반대해 거리로 나서자, 그리스식 대중 항쟁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 개악법 통과를 보류했고, 우체국 민영화도 잠정 중단했다.

2백50만 명의 정부 반대 파업과 시위

사람들은 공공 서비스 유지·확대, 연금과 일자리 보호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돈이 없다’던 사르코지가 기업과 은행 소유주와 대주주들을 살리는 데 공적 자금을 사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크게 분노했다. 그래서 한 언론 조사를 보면 응답자 중 거의 70퍼센트가 이날 파업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시위 대열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구호는 “저들의 위기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다”였다.

사르코지와 그 일당들은 1월 29일 파업을 앞두고 ‘시위 조직자들이 폭력을 조장한다’, ‘노동자들이 파업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까불었다. 그러나 이날 시위의 규모를 본 그들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허풍쟁이 사르코지는 ‘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결의를 다졌지만 프랑스 우익 언론들은 입을 모아 사르코지의 ‘개혁’이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했고, 일부 언론은

사르코지가 개악 정책을 고수하면 아이슬란드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